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20일 (음력 11월 14일) 목요일

“절대 안돼” 무안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확산



‘광주 군공항’ 이전 유력후보지 중 하나인 전남 무안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의회에 이어 민간단체 등 주민들까지 반대운동에 가세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무안 공항 인근 망운면을 시작으로 현재 전체 9개 읍·면 중 7개 읍·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공항 반대대책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대대책위에는 변영희와 이장협의회, 새

군·군의회 체계적 대응...면단위 반대대책위도 구성 변영희·이장협의회 등 참여해 현수막 게첨 등 활발

마을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은 물론 마을단위의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 곳곳에 광주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군공항 이전 절대 안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거는 등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무안군도 군공항 이전 대응 전담부서 설치와 기관·사회단체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조작개편을 통해 미래전략에 군사공항대응팀을 신설하고 주민대책위의 현장실명과 견학 참가자들에 대한 차량 및 식비지원, 기관·단체의 토론회·세미나·서명운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군공항 특위’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등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항이전 현황과 주민 피해대책 마련, 이전대응 방안 강구, 국회와

국방부·광주시 방문 등을 통해 반대시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반대대책위를 꾸리지 않은 나머지 2개 면에서도 내년 1월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공항 대응을 위한 용역과 반대대책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광주시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무안과 해남 영암, 신안 등 4개 지자체 6곳으로 압축했다. 국방부도 이들 4곳 중 2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역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올 내 후보지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광주시가 5조7480억원을 들여 15.3km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km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무안=이가성 기자



상도의?

비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의 국회 정보위원장 지리'를 놓고 여야가 고심 중이다. 정보위원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 합의정신에 어긋나고 비판했다. 김관영 비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한국당이 정보위원장 지리'를 해서 상임 위원을 차지한다면 비록의간을 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적을 옮기면서 지리'를 내놓지 않았다”고 고집하는데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이학재



김관영



홍영표

전남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3월부터 10월까지 30~200만원 받고 수확기 일괄 상환...이자는 지원

전남도는 광역 도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농가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 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해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그 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대부분 비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진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형태의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여유 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전남도, 오늘 택시 동맹휴업 대책 마련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증차·연장 운행 차량 부재 일시해제...대중교통 이용 유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20일부터 지역 택시업계가 전국적인 택시 동맹휴업에 동참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택시 종사자 68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지역 법인·개인택시 3100여대가 같은날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동맹휴업을 벌인다. 광주에서는 법인택시업체 사업주와 개인택시 종사자 등 180여명이 상경투쟁에 나선다. 시 교통국국은 법인택시 2839대가 하루 동안 동맹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택시 200여대도 휴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마지막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시내버스 77개 노선 931대가 21일 오전 1시까지 총 413회 증편운행한다. 지하철 1

호선은 상·하행선 모두 운행이 4차례 더 늘어나, 21일 오전 12시30분까지 운행한다. 광주시는 개인택시 조합을 상대로 정상운행을 설득하는 한편, 개인택시에 대한 3부제도 해제한다. 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주요 관공서의 차량 5부제도 일시 해제된다. 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도 벌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택시업계 종사자 520여명이 서울로 향하며, 순천지역 개인택시 100여대가 휴업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2개 전 시·군에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휴업에 참여하는 개인택시가 많은 순천지역에 대해 시내버스 5개 노선의 운행을 1차례 증차했으며, 개인택시 6부제를 해제했다. 다른 시·군은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가 집중배차되며, 주요 노선을 지나는 시내버스가 증차된다. 도는 아울러 지역방송과 SNS,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운행정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